연말 입법 전쟁 종료 … 여야, 내년 재보선 체제 전환

민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정원 등 쟁점법 마무리
4선 우상호, 與 첫 출마…野, 이종구·이혜훈 등 출마선언 줄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가로막혀 강제종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의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는 14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이 전부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마침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정원 개원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낸 개혁 법안이다. 정부기관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과거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 개입 등에 악용돼 왔던 국내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정보와 국가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성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좋은 후보를 내고, 내년 4월까지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경제를 안정시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왜 백신 구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방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연말 입법 전쟁이 종료하면 여야는 빠르게 내년 재보선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전날 출마선언을 통해 첫 주자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결단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몇 차례 연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금주 내 매듭짓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종구·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등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멸위기 지역별 정책대안 발굴

민주당 TF, 국회의원·권역별 전문가 등 40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절반 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때를 언급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했고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면서 "끈질기게 해도 효과가 날까 말까 하는데 중간에 멈춰서는 안된다.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TF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 권역별 전문가 등 총 40명이 참여한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조오섭(북구갑)·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소멸위험 지역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솔선수범해야"

與 지도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마스크 없이 와인 모임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4일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방역에 있어서 만큼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강조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을 또 SNS에 올린 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행동 단속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의 행사·모임 취소' '당 공개일정 참석자 최소화' 등을 지침으로 내놨다. /오광록 기자 kroh@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막판 수싸움

오늘 오전 개시…양측, 증인심문·징계위 구성 놓고서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수싸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도 징계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권한을 안 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으니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의 위원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이날 절차상 문제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도 2차 심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정훈,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4일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재난으로 상가 및 관련 집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 등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